제329회 국회(정기회)
2014. 10. 24.

업 무 현 황

2014. 10. 24.

법 제 처
www.moleg.go.kr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

목 차

Ⅰ. 일반 현황 ····· 1

1. 조직 ····· 3

2. 정원 및 현원 ····· 4

3. 2014년 예산 현황 ····· 5

Ⅱ. 2014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····· 7

1. 정부입법의 총괄·조정·지원 ····· 9

2. 법령심사 ····· 11

3. 법령해석 ····· 12

4. 법령정비 ····· 13

5. 법제지원 ····· 17

6. 법제교육 ····· 23

7. 법제정보의 관리 및 제공 ····· 26

8. 법제교류협력 ····· 28

9. 법령홍보 ····· 30

Ⅲ. 2013년 국회 지적사항 조치결과 ····· 33

Ⅰ. 일반 현황

1. 조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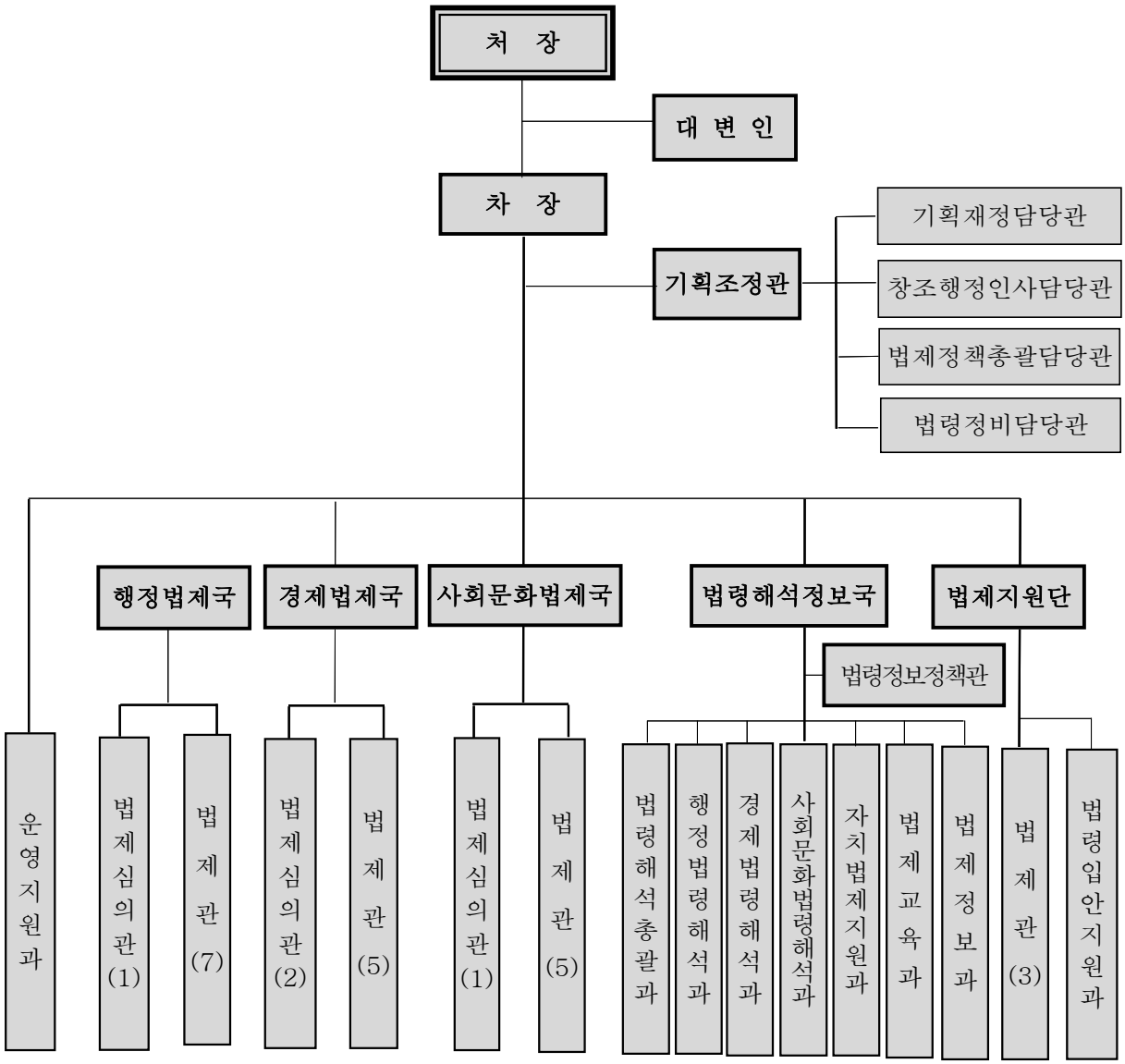
2. 정원 및 현원

3. 2014년 예산 현황

1. 조직

○ 처장 : 정무직 공무원
○ 차장 : 일반직 고위공무원
○ 1조정관 4국 1단 1정책관

(2014. 10. 14. 기준)



2. 정원 및 현원

(2014. 10. 14. 기준, 단위: 명)

인원 / 직급	정원	현원	과부족
계	187	183	△4
처장	1	1	
차장	1	1	
고위공무원	11	11	
3급 또는 4급	7	7	
4급	27	27	
4급 또는 5급	20	20	
행정·전산 5급	72	69	△3
행정·전산 6급	22	19	△3
행정·전산 7급	10	12	2
행정 8급	6	4	△2
행정 9급	1	2	1
전문경력관	1	1	
기록연구사	1	1	
운전직	4	4	
사무운영직	3	4	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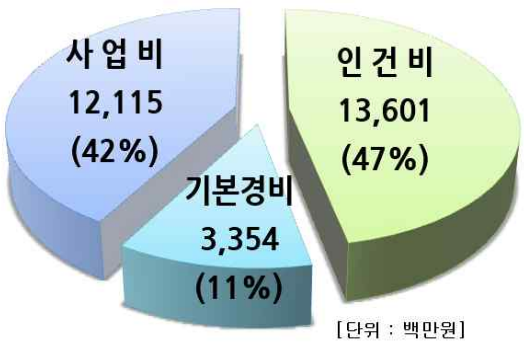
3. 2014년 예산 현황

○ 총 290억 7천만원

※ 세입·특별회계 및 기금은 없음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13년도 예산	2014년도 예산	증감액	증감률(%)
계	27,739	29,070	1,331	4.8
인 건 비	12,848	13,601	753	5.9
기 본 경 비	3,404	3,354	△50	△1.5
사 업 비	11,487	12,115	628	5.5



▣ 주요 사업비 현황

- 법제정보제공: 1,196백만원
-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서비스: 738백만원
- 법제정비: 956백만원
- 알기쉬운법제구축: 541백만원
- 법제교육및법제전문인력육성: 1,027백만원
- 법제업무정보화추진: 5,366백만원

Ⅱ. 2014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

1. 정부입법의 총괄·조정·지원
2. 법령심사
3. 법령해석
4. 법령정비
5. 법제지원
6. 법제교육
7. 법제정보의 관리 및 제공
8. 법제교류협력
9. 법령홍보

1 정부입법의 총괄·조정·지원

□ 주요 내용

○ **정부입법계획** 수립·시행, **입법예고** 제도 운영, **하위법령 제때 마련** 관리 등을 통해 각 부처의 입법활동을 총괄·조정·지원

○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등 **범정부적**으로 추진하는 **핵심정책**에 대한 **입법계획** 별도 수립·지원

□ 추진 실적

○ **정부입법**이 조속히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**각 부처의 신속한 입법추진** 및 **입법절차** 진행 **지원**

- 2014. 1. 29. 「2014년도 정부입법계획」(법률 324건) 수립 및 국회 통지, 10. 14. 현재 수정 정부입법계획 356건(국회 통지)

○ **국정과제 등 주요정책**의 이행을 위하여, **중·장기**의 입법계획 수립 및 지속적 입법 추진

- 국정과제 법안 총 459건 중 국회통과 215건(46.9%), 국회계류 164건(35.7%), 국회제출 필요 80건(17.4%, 2014년 57건 및 2015년 이후 23건)

○ **하위법령 제때 마련**을 위한 **노력** 지속

- 제·개정 법률 시행을 위한 **제때 정비 필요 하위법령**에 대한 신호등 **점검체계** 도입, 하위법령 **제때 마련율 98% 이상 달성**

* 최근 하위법령 제때 마련 실적: '13년 95.9% ⇒ '14년 98.8% (10. 14. 기준)

□ 향후 계획

○ **주요 법안**에 대한 **입법지원 강화**

- 입법단계별 진행상황의 지속적 점검을 통해 주요 법안이 **신속하게 국회에 제출되도록 지원**
- 정부입법 추진 과정에서의 **부처 간 이견** 등 쟁점을 조기에 파악하여 **정부입법정책협의회** 상정, **부처협의 촉진**

○ **입법예고 제도 개선**

- '13년도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**입법예고**의 **실효성 강화** 등을 위한 **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**

2 법령심사

□ 주요 내용

○ 정부입법 과정에서 **위헌·위법적 요소**를 사전에 걸러내며, 현행 **법령체계와의 조화**를 도모함으로써, 헌법, 법률·조약, 대통령령, 총리령·부령 등에 이르는 **국법체계의 통일성** 유지

□ 추진 실적

○ **'14년(10. 14. 기준)** 법률 145건, 조약 56건, 대통령령 587건 등 **총 1,308건 심사 완료**

< 2014년 법령심사 현황 >

(단위: 건)

구분 / 건수	법령			조약	훈령
	법률	대통령령	총리령·부령		
1,308 (10. 14.)	145	587	500	56	20
	1,232				

○ 법령심사 **접수**하기 **전**에 **미리 법령안**을 **검토**하는 등 법령안 개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**사전심사제도**를 **활용**하여 심사기간 단축

- **'14년(10. 14. 기준) 평균 심사기간**은 **12일**

* 최근 평균 심사기간 실적: '11년 14.2일, '12년 13.3일, '13년 11.2일

3 법령해석

□ 주요 내용

○ 행정기관 간에 법령 해석상 대립이 생긴 경우, **최종적인 유권해석**을 통해 정부 견해의 통일성 유지, **법령 의미**의 **명확한 제시**를 통한 법 집행의 공정성·신속성 제고

○ **민원인**이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일정한 요건*하에 **직접 법령해석을 요청**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권익 구제 확대(2010년부터 시행)

* 해석요청 의뢰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이 1개월 이내에 해석요청을 하지 않거나, 부당하게 해석요청 의뢰를 거부하는 경우(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제26조제9항)

□ 추진 실적

○ '14. 10. 14. 현재 법령해석 처리실적 : 313건 회신(처리기간 34.8일)

○ 민원인 해석요청의 적극적 처리 노력

- 민원인 법령해석요청 처리 지침('13. 5. 24.)을 적용, 형식요건을 완화 운영하여 민원인 해석요청의 회신율 제고 도모

< 민원인 직접 해석요청 회신 현황 >

구 분	2010년 (10월~)	2011년	2012년	2013년	2014년 (10.14. 현재)
회신건수	3건	104건	75건	88건	96건

○ 법령해석 관련 민원인 상담 강화

- 민원인 만족도 개선방안을 마련('14. 4월)하여 법령해석 관련 민원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담절차 마련·운영

* 2014년 법령해석 관련 민원상담 건수(10. 14. 현재) : 1,340건

4 법령정비

가 경제 활력 증진과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법령의 정비

□ 주요 내용

○ **불합리한 규제법령 및 국민불편 법령의 정비**

-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진입규제·행위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법령 및 국민이 지키기 어려운 불편법령 등을 발굴·정비함으로써 경제 활력 증진 및 법치기반 확립

○ **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법령 개선**

-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령 개선사항을 발굴·정비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 강화

□ 추진 실적

○ **국민소통 및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규제법령 및 불편법령 정비과제 발굴**

- 현장 간담회, 국민참여입법시스템 및 아이디어 공모제 등 일반 국민들로부터 직접 개선의견을 받아 제도개선사항 발굴

* '14년 全 국민 대상 법령개선 아이디어 공모제 실시(2.10~4.10)

* 지방자치단체 법령정비 개선의견 수렴(5~6월)

* '14년 현장간담회(2월 파주 문발공단, 10월 서울시) 2회 실시, 기업인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의 건의사항 청취

○ **'14년도 상반기 발굴 법령정비과제 국무회의 보고 및 정비 추진**

- 영업·사업 인허가시 결격사유 관련 과도한 진입규제 개선, 국민들의 경제활동 편의 증진 등을 위한 법령정비과제 280건 확정, 국무회의 보고(7. 1.)

- 각 부처에 상반기 발굴 법령정비과제의 신속한 입법 추진 요청(7. 10.)

※ 각 부처와 협조하여 기존 법령정비과제의 입법추진현황 관리

• 각 부처에 법령정비과제 현황 통보 및 신속 정비 독려(4. 25, 8. 28, 10. 10)

• '08년부터 국무회의 보고된 989건의 일반정비과제 중 790건(80%) 정비 완료

○ **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체계적 정비**

- 장애인 단체 및 부처와 협력하여 맹인, 간질 등 **9개의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선정**,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**109건**의 법령 정비 추진

* 109건 중 35건 정비 완료(대통령령 14건은 법제처 주관으로 일괄입법 추진), 74건 정비 예정

□ 향후 계획

○ **부처 간 협업**을 통한 **신속한 법제화**

- 법령정비과제의 입법진행상황 모니터링, 부처별 정비현황 점검·보고, 제도개선기관과 협업 등을 통해 **적극적 입법추진 관리** 및 **신속한 정비 추진**

* 부처별 법령정비과제 정비추진현황 국무회의 보고 예정(10월말)

나 숨은 규제인 행정규칙의 집중 정비

□ 주요 내용

○ **서비스·경제 분야 행정규칙의 선도적 정비**로 경제 활력 증진

- **서비스산업 및 투자 분야** 등 경제 관련 행정규칙에 담긴 **숨은 규제**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

* 정비 대상 행정규칙: 5대 서비스 분야(보건·의료, 교육, 관광, 금융, 소프트웨어) 및 투자 등 주요 경제 분야 행정규칙(약 7천여건)

○ **행정규칙에 대한 법리적 지원 강화**

- 법령에 근거가 없고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등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정규칙을 정비하고 규제 관련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할 수 있는 방안 강구

○ **행정규칙 전수조사** 실시, **법령정보시스템과 연계** 등을 통해 **행정규칙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** 마련

□ 추진 실적

○ 산업부·복지부 등 28개 기관 행정규칙 6,500여건 **검토** 완료, 그 중 **규제개선과제 340건 발굴, 해당 부처에 5회 통보**

- 국조실과 협업하여 **규제개선과제** 부처 통보 시 부처가 정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신속 정비하도록 독려

< 규제개선과제 유형별 분류(340건)>

비용개선	인허가개선	제재처분개선	진입·중복규제	기타 개선	계
29	71	75	38	127	340

○ 2014년 상반기 발굴 행정규칙 개선과제 국무회의 보고(7. 1.)

- 2014년도 상반기에 발굴한 **행정규칙 개선과제의 현황** 보고, 신속한 정비를 위한 각 부처의 협조 요청

○ **부처 정비 추진 현황** 일제 **점검·조사** 실시(10. 1. ~ 10. 10.)

- 부처 수용 과제에 대한 정비 추진 현황 파악

○ **행정규칙 전수조사 실시**

- 행정규칙 체계적 관리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43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행정규칙 전수조사 실시(4. 4.)
- 행정규칙 발령 및 등재현황, 형식·내용별 분류, 일몰제 운영현황 등에 대한 관리 체계의 기틀 마련
- 법령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법령과 관련된 행정규칙을 시스템에서 바로 확인, 행정규칙에 대한 정보공개 및 국민 접근성 제고

* 모든 행정규칙이 공개되도록 함으로써 규제가 숨을 곳을 사전에 차단

<법령정보시스템 행정규칙 확인(예시)>



□ 향후 계획

○ 발굴 과제의 **연내 정비율 제고**로 **국민의 규제 완화 체감도 제고**

- 연말까지는 **발굴된 과제의 정비에 역점**을 두어 추진하되, 신규 과제도 지속 발굴
- 부처 정비 추진 현황 일제 점검·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정비 지연 대상 등 파악, 신속 정비 촉구 및 추가 점검 실시
- **부처별 정비 추진 현황 및 실적 국무회의 보고**(10. 28.)

○ **법리적 지원 강화**를 위한 **법제처 사전검토제도** 등 도입

- 「행정규제기본법」 개정을 통한 법제처 의견제시제도 도입(국무회의보고, 8.19)
-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) 개정을 통한 부처협의 의무화, 이견조정절차 명문화 등 도입 (부처협의 중)

5 법제지원

가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의 통일된 의견 제시

□ 주요 내용

○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의원입법에 대한 부처협의를 지원하여 정부의 통일된 의견 도출

○ 향후 법률 통과 시 적법한 하위법령의 마련과 원활한 법집행을 위한 법리적 의견 제시

□ 추진 실적

○ 의원입법의 규제신설·강화, 조직 및 예산 등 각종 법적 쟁점에 대한 법제처 의견과 부처협의 필요사항을 소관 부처, 관련 부처 또는 법사위에 통보

- 2014년 의원발의 법률안 1,052건에 대한 법제처 의견 통보

(2014. 10. 14. 현재)

쟁점유형	쟁점							합계
	법리	정책	조직	예산	규제	복합	기타	
통보건수	110	165	8	88	101	544	36	1,052

○ 의원입법에 대하여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경우 **정부입법정책협의회**를 개최하여 **부처 간 이견을 신속히 조정, 정부의 통일된 의견 도출**

- 의원입법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2014년 13회 개최하여 이견 조정

□ 향후 계획

○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부처협의 강화

- 의원입법지원시스템을 개편하여 소관부처, 국무조정실(규제), 기획재정부(예산) 및 안전행정부(조직)에 의원입법의 발의사실 및 부처협의 필요사항 통보 등 협조체계 강화
- 의원입법에 대한 부처협의를 명문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개정*

  * 현재 부처 협의 중, 11월 공포 예정

○ 법리적 쟁점 등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법률안에 대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지속적 개최 및 신속한 부처 간 이견 조정

나 자치법규에 대한 법제지원 확대

□ 주요 내용

○ **적법한 자치법규 입안 및 해석 지원**

-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의 입안 및 집행 과정에서 상위법 위반이나 해석에 관한 의문이 있는 경우, 법제처의 의견을 제시하는 **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** 운영

○ **조례 전수조사를 통한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**

- 자치법규 정비를 원하는 지자체를 선정,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**종합적 정비기준**을 마련하여 **신속한 정비 지원**, 다른 지자체의 자율정비 유도·지원

○ **지방-중앙 간 자치법제 지원 협업 강화**

- 중앙행정기관의 효과적인 자치입법 지원을 위하여 **모델조례안**에 대한 **사전 검토** 지원

- **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선** 관련 국무조정실, 안전행정부 등 **관계부처**와의 **협업** 강화

□ 추진 실적

○ **신속한 자치법규 의견제시제도 운영 실적**

- 2011년 3월 자치법규 의견제시제도 시행 이후 2014. 10. 14. 현재까지 회신건수는 총 1,217건으로 평균 안건처리기간은 16.5일 소요

<자치법규 의견제시 처리 현황>

구분 / 연도	처리건수 (회신건수)	평균 처리기간
2011년	271건	15.6일
2012년	379건	18.8일
2013년	387건	14.9일
2014년 (10. 14. 기준)	180건	15.4일
총계	1,217건	16.5일

○ **조례 전수조사를 통한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**

- **2014년도 상반기,** 자율정비 신청 지자체 중 **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양주시 2개 지자체 선정, 자율정비지원 실시**(4.1.~6.30.)

  * 서울특별시 조례 422건 중 정비대상 조례 237건, 경기도 양주시 조례 254건 중 정비대상 조례 152건

- **2014년 하반기,** 자율정비 신청 지자체 중 충청남도, 서울시 강남구, 경남 하동군 등 **7개* 지자체 선정**(7월), **자율정비지원 실시 중**

  * 광역 2개(충청남도, 대전광역시), 기초 5개(충남 아산시, 경남 하동군, 전남 영암군, 서울시 강남구, 인천시 남동구)

○ **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및 협업 강화**

- 조례 규제개혁 사례 공유 및 지자체 법제 담당자와의 소통을 위한 **권역별 지자체 법제담당자 연찬회 개최**(3차례)

  * 호남·제주권(3.6.), 영남권(3.27.), 충청・강원권(9.18.) 개최

-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례 입안 및 해석 등 종합상담을 지원하는 **"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" 운영**(2차례)

  * 충청남도(9.24.), 아산시(10.16.)

○ **중앙정부 차원의 자치법제지원 협업 강화**

- 국토교통부의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」(8.5.) 등 총 5건에 대한 사전검토 지원
- 안전행정부와 합동으로 8개 권역별 자치단체 대상 규제개선 관련 순회교육 실시(5.13. ~ 5.23.)

□ 향후 계획

○ **신속하고 내실 있는 자치법규 의견제시제도의 지속적 운영**

- 민선 6기 출범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 이행 등 자치법규 의견요청이 증가하고 있는바, 신속한 자치법규 의견 회신

○ **2014년도 하반기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실시(계속)**

- 하반기 자율정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**7개 지자체**(광역 2개, 기초 5개)에 대한 **자율정비지원 연말까지 완료 추진**

  * 서울시 강남구, 충청남도, 아산시 조례는 10월말까지 완료, 대전광역시, 경남 하동군, 전남 영암군, 인천시 남동구 조례는 연말까지 완료 예정

○ **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및 협업 강화**

- 수도권 지자체 법제담당자 대상 연찬회 개최(11월 중순)
- “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” 운영(12월 중순)

다 사전입법지원 실시

□ 주요 내용

○ 법령안의 **입안 단계**부터 **체계적·전문적 입법 지원**

- 정부가 추진하는 법령안에 대해 입안단계부터 조문화 및 법리적 쟁점 검토를 전문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입법 추진 도모

□ 추진 실적

○ 2014. 10. 14. 현재 사전입법지원 실적: **법령안 158건 지원**

- 산업통상자원부, 교육부 등 28개 부처 소관 법령 158건에 대해 필요시 법제자문관(외부 법제전문가로 구성, 총 46명)의 자문을 거쳐 법령안의 법리적 쟁점 검토·회신

○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**'사전입법 집중지원제' 실시**

- 국정운영을 위한 핵심과제 등을 대상으로 소관부처, 법제처 및 외부전문가로 입안팀(bill team)을 구성하여 지원

* '14. 10. 14. 현재 「행정규제기본법」 등 13건에 대해 사전입법 집중지원 실시

□ 향후 계획

○ 사전입법지원 요청 법령안에 대한 지원 지속 추진

- 사전입법지원 제도를 홍보하고, 제도 이용자로부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도모

○ 부처의 사전입법 집중지원 수요를 지속적으로 조사

* 과제의 중요성, 입법의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대상 법령안을 선정, 집중지원 실시

6 법제교육

가 법치주의 확산을 위한 법제교육 확대

□ 주요 내용

○ **공무원 등의 법제전문성 향상을 위한 법제교육 확대**

- 중앙행정기관,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법령 입안 및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**전문적·체계적 법제전문교육** 실시(2010. 9. 법제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)

○ **법치주의 초석 마련을 위한 "법제교육원" 설립 추진**

- 국정성과는 공무원의 법제도 수립·집행을 통해 국민의 생활현장에서 실현되는바, 공무원 등의 법령입안·해석 및 집행역량 강화를 위해 **독립된 전문교육기관**으로서 **'법제교육원' 설립 추진**

□ 추진 실적

○ **확대된 법제교육 수요**에 적극 대응하여 법령입안·해석, 규제법령정비 등 **법제교육의 양적·질적 확대**

- 공무원 등의 법제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법치주의의 확산을 위해 **현장·실무중심 법제교육과정** 및 강의기법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

- 2014년 10월 현재 **총 11,761명 교육** 실시(연간 12,640명 교육계획), 전년 같은 기간(총 9,668명) 대비 **20% 이상 증가**

【 법제교육 운영 실적 】

	과정수(개)	횟수(회)	일수(일)	인원(명)
2012년(A)	16	66	197	4,992
2013년(B)	34	146	330	11,267
2014. 10. 14.현재	39	210	327	11,761
연간 증가율 [(B-A)/A]	112%	121%	67%	125%

○ 일선공무원 등의 규제개혁 역량 및 행정분야별 법제역량 강화를 위해 **사례 중심 규제법령정비 과정** 및 **환경·건축 등 주요 행정분야별 입안·해석 및 자치법규 통합과정을 신설·운영**

* 중앙·지방·공공기관 대상 사례중심 규제법령정비과정(3월, 7월, 9월)을 통해 총 198명 교육, 사례중심 실무건축법제·환경법제과정(5월, 6월) 운영을 통해 총 207명 교육

○ 교육 수요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**"기관 맞춤형 법제교육"** 및 **"시·도 순회식 법제교육"**의 적극 운영을 통하여 정책현장과의 소통 및 해당 분야에서 요구되는 법령 입안·해석·적용능력 강화

* (맞춤형 법제교육) 2013년 총 57회, 5,738명 교육 실시, 2014년 10. 14. 현재 57개 기관, 115회, 5,953명 교육 실시

* (시·도 순회교육) 2013년 17개 시·도(교육청 포함) 공무원 3,123명 교육 실시, 2014년 10. 14. 현재 28개 시·도 공무원 3,473명 교육 실시

○ **"법제교육원" 설립 및 법제교육시설 확충 추진**

- 공무원 등의 법령입안·해석 및 집행역량 강화를 위해 **독립된 전문교육기관**으로서 **'법제교육원' 설립 및 확대되는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교육시설 확충 추진**

* 법제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(충북 음성군 충북혁신도시 내) 매입(12월말까지 기재부 소관 비축토지사업 예산으로 매입 예정), '15년도 부지사용권 및 시설설계비 등 예산 확보 추진

□ 향후 계획

○ **정책현장 활용도 높은 교육분야 지속적 발굴 및 교육 확대**

- 일선공무원 등의 정책입안·해석·집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**법 역량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**되는 교육분야 발굴 및 교육 확대

* '14년 하반기 중앙·지방공무원 등 대상으로 교육수요가 많은 개인정보보호법, 소방안전관계법령, 지방자치법, 지방재정법, 공유재산법령 등 교육 예정

○ **대국민 법제교육 확대 실시 추진**

- **향후 독립된 전문교육기관 설립**을 통해 일반국민이 입법의 중요성 및 법치주의에 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**기업, 학교 등을 포함한 대국민 법제교육** 확대 추진

나 어린이·청소년 법제관 제도 운영

□ 주요 내용

○ **(어린이법제관)** 초등학교 4~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**준법정신을 심어주고** 어린이 관련법을 **어린이 시각에서 개선**해 나가기 위해 **다양한 입법체험프로그램 운영**

○ **(청소년법제관)** 학생 스스로 **학교규칙 개정에 참여하도록 지원**하여 학교규칙을 내실화하고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**다양한 입법체험활동**을 통해 **준법정신과 법치주의의 중요성 교육**

□ 추진 실적

○ **(어린이법제관)** '14년도 제7기 어린이법제관 **총 1,500명 위촉**

- 어린이법제관 한마당, 지역별토론마당, 법안만들기 대회, 법 캠프, 법 관련 기관 탐방 등 **14회 입법체험행사** 개최, **총 735명**(중복제외) 참가
-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(www.moleg.go.kr/child)를 통하여 **법령 관련 의견 총 2,931건** 개진, **월별 주제 토론 총 679건 참여**

○ **(청소년법제관)** '14년도 청소년법제관 운영 학교로 전국 10개교 신청, 청소년법제관으로 **10개교 309명 위촉**

- 학교별 전담 법제관을 지정하여 **방문교육 10회 실시**, 지도교사 대상 워크숍 개최, 학교규칙 개정 안내책자의 제작·배포
- **법 캠프**, 법 관련 기관(지방의회) 탐방 등 **체험프로그램 진행**

□ 향후 계획

○ **(어린이법제관)** 법령 해석 백일장 대회 2회(10월), 사회적 배려계층 어린이법제관 초청행사(12월), 제7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('15.1~2월)

○ **(청소년법제관)** 법 관련 기관(국회, 헌재, 법원 등) 탐방 2회(10월), 청소년법제관 우수사례 발표회(12월), 우수사례집 발간 및 전파

7 법제정보의 관리 및 제공

□ 주요 내용

○ **국가법령정보센터**를 통한 법령정보 통합 구축 및 **One-stop 서비스** 제공

- **법령, 조약, 행정규칙, 자치법규, 판례** 등의 법령정보(약 195만건)를 데이터베이스로 **통합 구축**하여 서비스 제공
- 제공 정보의 **정확성·통일성 증진**을 위하여 **법령정보 검증** 수행 (법령 상하위 관계, 연혁법령 정확성, 법령 연계, 법령 3단 비교 등)

○ 국민의 일상과 관련된 **생활법령정보**를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**주제별, 생애주기별**로 분류하여 **찾기 쉽게 제공**

- 성별·직업·결혼 여부 등을 선택하면 국민 각자의 상황에 맞는 생활법령을 찾아주는 **개인별 맞춤형 서비스** 제공

○ 법령안 입안부터 공포까지 정부입법 관련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일괄 처리하는 **통합 정부입법시스템 구축**(2013~2015년)

- 입안·심사, 법령해석, 자치입법 지원 등 **정부입법 업무를 통합**하여 중앙부처, 지방자치단체 간 **협업 체계 마련**

□ 추진 실적

○ 국가법령정보 **데이터 품질 제고**,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'내 손안의 법전' 앱 **서비스 개선**

- 법령별 **상하위법 연계 정보 검증**(2014. 7월 완료) 및 **조문 연계 서비스 품질 개선** 방안 수립·추진
- 국가법령정보 **앱의 조문 검색 기능** 및 법령에서 위임된 **자치법규**(서울시) **연계 서비스** 개발

○ 수요자 중심의 **생애주기별·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** 제공 및 **다국어 서비스 확대**

- **13건의 콘텐츠 개발·고도화**(2014. 9월 기준 총 231건 서비스 중)
- 특히, 세대별로 겪고 있는 **5대 불안**(입시, 취업, 주거, 보육, 노후) 해소에 도움이 되는 **맞춤형 법령정보 제공**(2014. 7.)
- **'자동차 운전면허' 다국어**(태국어, 아랍어, 인도네시아어, 일본어, 몽골어) **콘텐츠** 개발·제공(2014. 8.)

○ **통합 정부입법시스템 1차 구축 완료**(2014. 1. 개통)

- 입법계획의 수립 및 관리, 법령안 입안·심사 등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스템에서 **일괄 처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**

□ 향후 계획

○ 행정규칙 품질관리 강화 등 **국가법령정보 서비스 품질 제고**

- **행정규칙 내용별 분류** 서비스 및 **법령에서 행정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해당 법령에서 바로 조회**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(2014. 12.)
- 상하위법·조문연계 **정보의 지속적 정확성 제고**, 위임된 자치법규(서울시) 검색 및 모바일용 조문단위 **검색 서비스 제공**(2014. 12.)

○ 개인별 **맞춤형 서비스 고도화** 및 **다국어 콘텐츠 추가 제공**

- **'맞춤형 생활법령'** 검색 조건 세분화 및 검색 결과 정비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**서비스 고도화 추진**('15년 예산안 반영 국회 제출)
- **'비자/여권/국적'** 영어 콘텐츠, **'외국인 투자자'** 아랍어 콘텐츠 등을 추가 개발하여 **외국인의 국내 정착 및 투자 지원**(2014. 11.)

○ 정부입법 **협업체계 구축** 및 **관련 시스템 통합 확대**

- 법령안 입안·심사, 법령해석, 자치입법 지원 등 정부입법 업무를 **정부입법시스템에 통합**(2014. 12.)

* 전자관보시스템, 온-나라시스템, 국민신문고, 나라e음(영상회의) 등과 연계

8 법제교류협력

□ 주요 내용

○ **세계 주요 국가 법제기관과의 교류·협력**

- 대한민국 법제도 전파, 외국의 최신 법제 동향 파악 및 법령정보 상호 교환 등 법제교류·협력의 국제적 기반 구축

○ **대한민국 경제·사회 발전의 근간인 법제발전 경험 공유**

- 아시아 각 국의 법제 협력·교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**대한민국 법제경험 공유를 통한 법제한류(法制韓流)의 확산 추진**

  * 법제처 방문 외국 공무원 수 : 2012년 46명→2013년 127명(176% 증가)

□ 추진 실적

○ **대한민국 법제 60년 경험의 공유와 확산**

- 3년간 집대성한 **'대한민국 법제 60년사'**(경제·사회·행정법제)를 바탕으로 아시아 각국에 맞춤형 법제 및 법제노하우 제공

  * 사우디아라비아, 몽골, 카자흐스탄, 우즈베키스탄, 태국, 마카오 등

- 법제처 방문 외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**우리 법제 교육 실시 및 몽골**(8월)**·인도네시아**(10월) **'대한민국 경제발전법제 특강' 실시**

  * 법제교육 실적 : 2013년 총10회, 127명 / 2014년 10월 현재 총7회, 70명

- **양국 정상 임석** 하에 **카자흐스탄 법무부**와 **교류 양해각서를 체결**하여 유라시아 국가와의 **법제협력 네트워크 확대**(2014. 6.)

  * 2014년 10월 현재 법제처와 협력 MOU 등 체결 현황 : 11개국, 16개 기관

- 우리 법제에 대한 외국의 관심 증가에 따라 **우리 법령 제공**

  * 베트남(행정법제, 환경법제), 캄보디아(건설법제), 중국(기후변화법제) 등

○ **국내 법령의 외국어 서비스**

- 국가법령 **영문화의 중복방지 및 효율적 체계 구축**을 위하여 한국법제연구원과 협조체계 마련(2014. 5.)

- **영문 법령 DB 공유**를 통해 각 부처 및 한국법제연구원이 번역한 영문법령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서비스(2014. 6.~)

○ **관계기관 협업**을 통한 체계적 업무 추진

- 법제관련 기관(대법원, 헌재, 법무부, 법제처)간 **협업체계 구축**으로 **공동 법제교류**사업 및 **해외 교육 사업** 등 추진

  * 한국-베트남 법률 심포지움(6월, 베트남), 몽골 한국법 특강(8월, 몽골)

□ 향후 계획

○ **대한민국 고도성장 법제의 맞춤형 제공**

- **60~70년대 고도성장기 경제 발전 법제 발간**, 아시아・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 배포 추진

○ **법령정보시스템(IT) 전파·보급**

- **미얀마 법무부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**을 KOICA ODA 사업으로 추진(2015~2018)

○ **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회의(ALES) 개최**

- 제2회 **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회의(ALES)**를 개최(10. 29.)하여 **카자흐스탄・우즈베키스탄과 IT법제 협력・발전방안을 논의**

○ **법제교류의 전제가 되는 영문 법령정보의 총괄 관리 강화**

- 관계 기관 간 통일된 외국어 번역 계획・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**「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」(국무총리 훈령) 제정**

- 법령 외국어 번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관계 기관 및 전문가 간 협의체 구성・운영, 번역 기준 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

9 법령홍보

□ 주요 내용

○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이 있어도 내용이 어렵고 시행일 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**쉬운 콘텐츠를 통한 지속적인 법령 알리기 필요**

○ 국민들의 법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**쉽고 다양한 방식의 국민 눈높이 홍보 추진**

□ 추진 실적

○ 수요자 중심으로 **법령 제·개정 소식**을 전문분야 신문 등에 제공

- 법률신문 등 전문지에 매달 시행법령 제공(3월부터 6회 제공)
- 법제처 정책메일을 통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법령정보 수시 제공

○ **법령캘린더 제공**

- 실제 적용되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달 주요 시행 법령을 한눈에 보기 편하도록 달력 형태로 제작·제공(매월 마지막 주 배포)

○ 새롭게 시행되는 **시행법령에 대한 시각자료 제공**

- 시행법령의 내용을 쉽고 재미있는 스토리로 구성하여 웹툰 제작(5월부터 매월 3편씩 제작하여 제공)
-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삽화 제공(매월)

○ 주요 **시행법령 소개 홈페이지 개설**

- 법령홍보 콘텐츠를 한곳에 모아 주요 포털 검색 시 바로 노출될 수 있도록 별도의 인터넷 페이지 개설(6. 16. 개설)

  * 주소: www.moleg.go.kr/monthlylaw

- 날짜별 시행 법령 정보, 법령캘린더, 웹툰, 보도자료, TV·라디오 방송 출연 파일 등 각종 시행법령에 대한 안내자료 소개

○ **정부홍보 매체 및 생활밀착형 매체를 통한 광고**

- **(정책브리핑)** 4월 주요 시행법령부터 별도 페이지 개설 및 업데이트
- **(위클리공감)** 매월 마지막 주 발간 호에 시행법령 소개
- **(카카오톡)** '대한민국 정부' 카카오톡 푸시메시지(시행법령 소개) 발송(7. 25.)
- **(법령홍보)** 주요잡지, 인터넷 포털사이트, 일간신문 등을 통한 홍보

※ 신문광고 2회, 잡지광고 2회, 인터넷포탈사이트 및 인터넷 언론매체 홍보 2회

□ 향후 계획

○ 주요 시행법령 소개 보도자료 및 법령캘린더 배포(계속)

○ (라디오・방송) TBS 라디오 9월 시행법령 소개(2014. 9.) 및 KTV 등 방송매체와 협의하여 하반기 시행법령 홍보

- 어렵고 딱딱할 수 있는 법령을 실생활에 쓰이는 언어로 쉽게 순화하여 전달력 강화

○ (신문・잡지) 「KTX매거진」 주요 시행법령 광고(2014. 11.) 및 법률신문 등 전문지에 매월 주요 시행법령 제공(계속)

○ (온라인) 날짜별 시행법령의 내용에 맞도록 웹툰, 법령캘린더 등 온라인 홍보콘텐츠를 제작하여 시행일 별로 SNS 홍보(계속)

- 시행법령 특화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하여 전 국민에 대한 접근성 강화

○ (매체협업) "대한민국 정부" 카카오톡 푸시 메시지에 매달 주요 시행법령 보도자료 및 캘린더 게재 및 발송(계속)

Ⅲ. 2013년 국회 지적사항 조치결과

1. 중앙행정기관 온라인서비스만족도를 제고할 것
2. 민원인 해석요청의 경우 기관(중앙행정기관)이 해석요청한 경우에 비해 회신율이 저조하므로, 이를 개선할 것
3. 민원인 직접 법령해석 요청 요건을 완화할 것
4. 법제처 홈페이지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는 홍보하지 말 것
5. 행정규칙 제·개정에 따른 결과를 즉시 정부입법전산시스템에 등재할 것
6. 각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법령영문화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것
7. 법령정비사업의 정비율을 제고할 것
8.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에 따라 법령해석 결과를 반드시 유관부처에도 통보할 것
9. 사전법적지원사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대형 법무법인 또는 법제처 공무원 출신과 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지 말 것
10. 어린이법제관 행사참여율을 제고할 것
11. 어린이법제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
12. 감사원과 연계하여 부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제처 유권해석을 불수용하는 경우의 대책을 강구할 것
13. 위헌법률 결정이 있는 경우 적시에 해당 법률을 개정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
14. 보다 적극적으로 법률에 대한 입법예고를 할 것
15. 공용차량운행일지를 관련 규정에 맞게 작성할 것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법제처	1. 중앙행정기관 온라인서비스만족도를 제고할 것	○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('13. 10.) 각 부서 민원전담관 지정, 민원전담관 회의 정기적 개최 ○ 불만족 민원에 대해서는 추가답변 작성,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Q&A 지속 발굴 및 업데이트 ○ 민원처리현황의 정기적인 점검·보고 및 개선사항 발굴 ○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민원처리 교육 및 컨설팅 실시('14. 8.) 및 다수 민원처리 담당부서 과장급 회의 개최('14. 9.)
	2. 민원인 해석요청의 경우 기관(중앙행정기관)이 해석요청한 경우에 비해 회신율이 저조하므로, 이를 개선할 것	○ 민원인 해석요청을 우선처리하여 전년 대비 회신 건수 증가 - '14. 1~10월 민원인 해석요청 96건 회신 (전년도 같은 기간 59건 회신) * 다만, 구체적 사실관계 판단 등 법령해석이 곤란한 민원인 요청이 크게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회신율은 하락 ○ 적법한 해석요청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·홍보 실시 - '14년 10월 현재 절차안내·상담 1,340건('13년 355건) - 제도홍보 리플렛 배포('13. 12월, 26,000부) 및 해석사례집 발간·배포('13.11.27 및 '14.4.30, 각 1,200부) ○ 향후 급증한 민원인 해석요청을 신속히 우선처리하여 민원인 해석요청 회신율 제고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	3. 민원인 직접 법령 해석 요청 요건을 완화할 것	○ 민원인 해석요청 시 요건 완화 운영 - 민원인 법령해석요청 처리 지침('13. 5. 24.)을 적용하고, '14. 4월 지침내용의 보완을 포함한 민원인 만족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형식적 요건 미비로 해석요청이 반려되지 않도록 하는 등 요건 완화 운영
	4. 법제처 홈페이지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는 홍보하지 말 것	○ 법제처 홈페이지에 홍보 게시물 등록 시마다 법제처 홈페이지의 기능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등록 ○ 법제처 홈페이지는 정부 전체의 법령을 총괄하는 법제처를 대표하므로, 정부 전체 입장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내용인지 신중 검토하여 홍보 추진
	5. 행정규칙 제·개정에 따른 결과를 즉시 정부입법전산시스템에 등재할 것	○ '13. 10월부터 소관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등재 여부 상시 모니터링 - 매주 미등재 행정규칙에 등재 요청 * '14년 10월 현재 총 49회 등재 요청 ○ '14년 등재율 대폭 상승 * '12년 75.8% → '13년 77.1% → '14년 85.8% ○ 등재현황 상시 모니터링 및 미등재 행정규칙 등재 요청
	6. 각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법령영문화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것	○ 중앙행정기관 대상 법령 영문화 수요 조사('14. 1월, 7월) 및 한국법제연구원과의 협의를 거쳐 법령 영문화 사업 추진 중 * (1월) 14개 부처에서 91개 법령 번역 요청 (7월) 17개 부처에서 175개 법령 번역 요청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		○ 영문법령 DB 공유를 통해 각 부처 및 한국법제연구원이 번역한 영문 법령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서비스('14. 6월~) ○ 관계 기관 간 통일된 외국어 번역 기준 마련 등의 근거를 위하여 「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」(국무총리 훈령) 제정 진행 중('14. 12월 완료 예정)
	7. 법령정비사업의 정비율을 제고할 것	○ 2014년도 상반기 법령정비과제 국무회의 보고시 부처별 미정비과제 현황 보고('14. 7. 1.) ○ 부처별 법령정비과제 현황 통보 및 신속 정비 요청('14. 4. 25., 7. 10., 8. 28., 10. 10.) - 법률은 2015년까지 국회제출, 하위법령은 연내 정비완료 원칙 통보 ○ 향후 법령정비과제 입법진행상황 상시 모니터링 및 미정비과제 신속 정비 독려 예정 * 법령정비과제('08~'13년 과제) 정비율: 82.1%('13.12. 기준) → 89.4%('14.10. 기준)
	8.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에 따라 법령해석 결과를 반드시 유관부처에도 통보할 것	○ 해석 검토과정에서 안건과 관련된 기관을 파악하여 법령해석 요청기관, 민원인,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니라, 해당 사안 관련 기관 및 관계법령의 소관 중앙행정기관 유관기관에도 빠짐없이 회신문 통보
	9. 사전법적지원사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	○ 대형 법무법인 또는 법제처 출신에 대한 자문료 편중 개선방안 마련('13. 11.)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	서 대형 법무법인 또는 법제처 공무원 출신과 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지 말 것	- 법무법인에 대한 자문 전면 중단 - 법제처 출신 전문가에 대한 자문료 상한제(30%) 실시 * '14. 10월 현재 법제처 출신 전문가에 대한 자문료 비율은 24.7%임
	10. 어린이법제관 행사참여율을 제고할 것	○ 행사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간 계획 수립 - 법안 만들기, 법령해석 백일장 등 법제처 특색이 드러나는 행사 추가 실시 ○ 예산과 인력의 범위에서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린이법제관을 최대한 수용 - 행사 공지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참여율 제고
	11. 어린이법제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	○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 즉시 삭제 및 온라인 게시물 전체 관리 강화 - 담당자의 개인정보 관련 업무 지침 숙지 강화 및 중간 관리자의 지속적인 홈페이지 관리 강화 ○ 향후 홈페이지 가입 시 꼭 필요한 범위에 한해 개인정보 수집
	12. 감사원과 연계하여 부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제처 유권해석을 불수용하는 경우의 대책을 강구할 것	○ 감사원에 '13년 상반기 불수용 사례 설명('13. 11. 25.) 및 통보방법 등 협업체제 구축 협의('14. 1. 3.) ○ 법령해석 불수용 사례 반기별로 감사원 통보('13년 11월, '14년 5월 및 10월) * '14년 상반기 법령해석 수용 여부 점검 결과: 188건 중 176건(94%) 수용, 12건(6%) 불수용 ○ 향후 유권해석 수용율 추이 지속 모니터링하여 개선 추진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	13. 위헌법률 결정이 있는 경우 적시에 해당 법률을 개정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	○ 위헌 결정 후 미정비 과제에 대한 부처 통보 및 조속한 정비 촉구 ('13년 10월·12월, '14년 2월·4월·6월·9월) * 위헌 결정 후 현재까지 미정비 과제 27건, 17건은 개정안 국회 계류 중, 10건은 정비 추진 중(10건 중 '13년 이후 위헌 결정 4건, 40%) ○ 정부입법시스템을 통하여 위헌결정법령 입법대상법령 관리('14. 1월) - 입안단계부터 위헌결정법령의 정부입법절차를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·지원 ○ 장기 미정비 사유 및 향후 정비계획 파악 및 주기적인 정비 촉구 (분기별) ○ 위헌결정법령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및 소관 부처 정비촉구 통보 (계속)
	14. 보다 적극적으로 법률에 대한 입법예고를 할 것	○ 입법예고 기간준수율 제고 노력 실시 - 매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 통보 시 입법예고 기간 준수를 위하여 국회제출일 또는 공포예정일 120일 전부터 입법예고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요청 * '14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지침 통보('13. 10. 31.) - 부처 입법계획 종합·검토 시 입법예고 기간이 충분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사전 점검(계속)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		○ 정부입법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해 늦어도 정부입법계획상 국회제출일 또는 공포예정일 90일 전 입법예고 될 수 있도록 각 부처 독려(계속) ○ 입법예고 제도의 운영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용역 실시('13. 12.) ○ 연구용역 기초로 입법예고제도의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검토 - '14년도 하반기 제도개선 방안 강구
	15. 공용차량운행일지를 관련 규정에 맞게 작성할 것	○ 「공용차량 관리 규정」에 따라 공용차량 배차·운행 내역을 작성하고, 매월 수시 점검